

산업부, 가스공사 사장 재공모 결정 노조 “전문성·공정성 인사원칙 확인”

임추위 추천 후보자 부적합 판단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아
최연혜 사장 체제 당분간 유지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자 전원에게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장 선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합하

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공모를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가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요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공기업 수장 선임은 공개모집 이후 임추위 추천, 주무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재공모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간 부적격 인사 배제와 재공모를 요구해 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절차 개선 없이는 다음 공모에서도 부적격 인사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연계 강화

미식·컬처 등 농촌 경제활성화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청년층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추세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추진됐다.

특히 K-미식·K-컬처 등의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미식벨트를 각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의 제작 및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기준 2525개에서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현재의 43.8%에서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상을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에서 자연·유희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공유 대회 등을 정례화해, 교류와 공유가 확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전통·유행 한식, 농가맛집 등)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농촌체험마을·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한다. 농촌관광 트렌드(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도 반영해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부-중기부, 일자리분야 정책 공조

기술인력 양성, 청년일자리 등 협력
취업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 부처는 앞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시스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AX(업무자동화·AI 전환) 지원과 노동부의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안전망도 보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동부는 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양 부처는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양 장관이 분기별로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 추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4곳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의 정책융자 취급을 허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

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마을공동체가 농지·유희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희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 전환에 정책 역량을 모으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도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 지자체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 개선을 도모한다.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검은콩 두유, 우유 수준 단백질 함유”

소비자원 1팩 기준 단백질 4~9g

검은콩 두유의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의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소비자에게 식물성 음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검은콩·아몬드·오트 등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

상으로 영양성분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법에 따라 열량과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 함량 차이가 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1팩(190ml 기준)당 단백질은 4~9g, 지방은 4~7g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시판 멸균우유(190ml 기준, 단백질 6g)와 비슷

한 수준이었다.

반면 오트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았고,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제품 포함)는 열량과 3대 영양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오트·아몬드 혼합’ 제품은 열량 35kcal, 탄수화물 4g, 단백질 1g, 지방 2g으로 가장 가벼운 영양 구성을 보였다.

검은콩 두유는 1팩당 558원에서 10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원에서 1717원으로 동일 유형 내에서도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